

# CONTENTS



## 연중기획 수원을 논하다 수원시의 일자리

- 04 현장르포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 사회적 경제를 키운다  
유종욱 (작가)
- 09 선진사례1 세대별 쏠림 없는 프랑스·미국의 일자리 정책  
전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18 선진사례2 청년일자리의 작은 불씨 소셜창업  
박기범 (사회적 기업 에코버튼 대표)
- 26 현안분석 수원시의 일자리 창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33 정책제안 고령사회, 수원시민의 인생 2모작 지원을 위한 제언  
이용국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지표로 바라보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 40 수원시 여성과 노인의 취업 현황 분석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연구리포트

- 42 수원시 인권실태조사 연구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생각보따리를 풀다

- 49 광복·분단 70년, 민통선마을은 안녕하신가?  
김일한 (동국대학교 교수)

## 56 수원시정연구원 소식 / 주요행사

## 63 편집후기

## 64 과월호 이미지

# 수원의 일자리 수(數)와 질(質)



수원의 일자리는 모자란가, 남아도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년의 일자리는 어떻고, 노인들의 일자리는 있기는 한가? 수원이 벤치마킹해서 일자리 정책을 혁신할 수 있는 해외 및 국내 사례는 없을까? 일자리가 넘쳐나도록 만든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일자리 문제가 전국적인 화두가 되어버린 팍팍한 세상.

수원의 일자리 그 수(數)와 질(質)을 논해본다. <편집자 주>

- 04 현장르포**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 사회적 경제를 키운다  
유종욱 (작가)
- 09 선진사례1** 세대별 쓸림 없는 프랑스 · 미국의 일자리 정책  
전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18 선진사례2** 청년일자리의 작은 불씨 소셜창업  
박기범 (사회적 기업 에코버튼 대표)
- 26 현안분석** 수원시의 일자리 창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33 정책제안** 고령사회, 수원시민의 인생 2모작 지원을 위한 제언  
이용국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수원시 사회적경제 체험탐방(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공)

수·원·을·논·하·다  
현장르포

##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 사회적 경제를 키운다

유종욱 (작가)

### 사회서비스의 한 축, '사회적 경제'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홀로 내던져진 기분”이라고 말씀하신 다문화여성 산모님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산모님과 같은 나라에서 오신 산후관리사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언어 소통을 도와드리고, 먹기 싫은 미역국 대신 그 나라 음식을 드시면서 회복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산모님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에 언어가 통하는 같은 고향의 사람이 함께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다문화여성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펼치는 사회적 기업 (주)다누리맘의 한만형 부대표는 애초 이 일을 계속해서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 부대표가 대학 시절 활동한 인액터스(Enactus) 단체와의 인연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으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그저 대학생들

이 모여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만 여겼다. 이때만 해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후배들에게 넘겨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진행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 도움을 받는 다문화여성 산모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현장에서 산모들의 고충을 몸소 접하면서 책임감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욕심도 생겨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다누리맘은 지난 2011년 11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비영리단체인 인액터스의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맘마미아’ 프로젝트에서 출발했다. 당시 대학생들은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생경한 음식으로 다문화여성들이 겪는 산후조리의 고충에 주목하면서 다문화여성 방문산후조리라는 사업 기획을 짰다. 마침 2011년 서울시가 주최한 청소년대학생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있어 참여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듬해에는 수원시 소셜 벤처 경진대회에서 1위에 올랐고 인기상까지 받았다.

“이주초기에 대다수 다문화여성 산모님들은 언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여성들도 보통 아이를 낳으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다문화 산모님들 대부분이 한국으로 이주하시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임신을 하시고 출산을 하시거든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에서 한국문화를 강요당하며 더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십니다.”

현재 다누리맘에 소속된 23명의 산후조리사들은 전부 다문화출신 여성들이다.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산후조리사들의 나라와 고향은 다르지만 같은 다문화 출신이라는 점에서 산모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산후조리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다문화여성 산모들에게는 미역국보다 고향에서 먹던 음식이 더 간절하다.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는 음식은 아니지만 같은 나라 출신의 산후조리사가 챙겨주는 음식에 마음은 한결 따뜻해지리라. 음식은 물론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서비스도 받는다. 도움을 받는 산모도 물론이지만 다누리맘에 소속된 다문화여성 산후조리사 역시 우리 사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연한 일원이 되고 있다.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는 다문화여성 산모 (다누리맘 제공)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윤 추구가 목적인 시장경제와 다르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공적 영역의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면서도 오히려 공공기관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사실 제가 사회적 기업가라고 생각해 본적도 없고,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문화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고, 이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분들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단지 한국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취약계층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다누리맘의 산후조리서비스는 일찌감치 다문화여성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난해 안양, 군포, 안산, 시흥에 이어 서울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지사를 따로 두기 보다는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을 통해 확장하고 있다. 산후관리사 모집과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다누리맘은 산후조리사 서비스 파견과 산모 모집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만형 부대표는 차후에 산후관리사로 활동하는 이주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회사 운영에도 참여시키고, 나아가 이주여성들 스스로가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윤 추구가 목적인 시장경제와 다르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공적 영역의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면서도 오히려 공공기관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한 부대표는 다누리맘의 사업 모델이 공익성이 강하지만 영리법인이다 보니 정부기관이나 민간주도의 비영리단체들과 사업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전한다. 가령 다문화가정 산모들에게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보건소,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특정기업에 대한 홍보부담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수원시처럼 자치단체나 사회적 경제 지원 단체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위해 네트워킹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자산 활용해야**

수원시 정자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서로좋은가게는 자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기업이 만든 생산품을 취급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각 지역별 자활센터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자활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일자리사업단 등에서 생산한 제품은 대부분 일정한 판로가 없어 수익을 내기 어렵다. 자활사업으로 일자리는 만들어졌지만 제품이 팔리지 않으니 운영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격이나 디자인 등에서 일반기업 제품과의 경쟁력이 약한 것도 문제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 이러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팔려야 한다. 서로좋은가게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착한만남, 착한상품, 착한소비라는 비전으로 생산자 소비자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 출발했다.

서로좋은가게는 2011년 8월 시흥작은자리지역 자활센터에 1호점(시흥점)을 내면서 가맹점을 늘려갔으며, 2013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서로좋은가게는 현재 취급점을 포함해 청주, 부산, 제주 등 전국에 27개 매장으로 성장했다. 자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생산에 한계가 있어 물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매장에는 소비자의 눈에 맞춰 친환경농산물과 공정무역제품도 들여놓고 있다. 자활 제품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장 디자인도 개발하고 있다. 서로좋은가게는 최근에 생산지의 안정화를 위해 행복중심형에도 납품을 시작했다.

“서로좋은가게가 그나마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민관의 파트너십이 좋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서로좋은가게는 자활센터와 경기도와의 협력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어요. 사회적 기업이 잘 뿌리 내리려면 민관의 파트너십이 잘 구축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는 성급함보다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의미지요. 이러한 가치와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좋은가게의 성명하 상무는 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상무는 어렵게 전국단위의 유통 루트를 만들었지만 일반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사회가 지역 사회적 기업의 자산을 좀 더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 간의 연대도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은 서로 경쟁 관계라기보다 연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의 소중함에서 출발**

사회적 경제는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높은 관심과 세밀한 지원책이 중요하다. 수원시는 민선5~6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류수열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타 도시 보다 수원시에 사회적 기업이 많은 이유를 수원시가 정책적 지원에 앞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서로좋은가게는 자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기업이 만든 생산품을 취급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각 지역별 자활센터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자활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서로좋은가게 제공)

현장르포

“근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사람’의 소중함에서 출발하는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자산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시가 수원 아닙니까? 특히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수원시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한 동력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담당자들이 있지만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시의 공직자들은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 인프라 확대 사업, 판로와 홍보 지원, 네트워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시 이러한 사업 중의 하나로 설립되었다. 지난 민선5기에 출범한 지원센터는 그동안 정자동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있다가 지난 2월 시에서 16억 원을 들여 영동시장 3층으로 이전해 왔다. 이곳에는 20개의 인큐베이팅룸도 마련했는데, 소셜 벤처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이 입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센터는 수원시 사회적 경제기업 설립, 인증지원부터 기업 육성, 네트워크 구축, 교육, 컨설팅, 경영지원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수원시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포함, 6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포함하면 180여 개에 달한다.

“양적인 성장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해요. 사회적 기업은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원에만 의존하면 한계가 있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재정적, 인적 지원에만 솔깃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이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시작하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에 놀랐어요. 지원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지원자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류 센터장은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장 먼저 들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상품경쟁력, 이웃 주민, 자원봉사자, 각종 단체 등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네트워킹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아직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판촉지원 활동이나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들을 우선구매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놓고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마련하느라 고심한다. 서로 좋은가게가 강조하는 ‘착한’이라는 영역은 기존 시장경제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 기업의 ‘착한’ 역할만 치켜세우면서 결국 시장경제적 관성으로 접근한다면 ‘착한’ 뿌리들이 좋은 경제, 좋은 일자리로 뻗어가기 힘들어진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 없이는 사회적 경제 역시 풀기 어렵다.



수·원·을·논·하·다  
선진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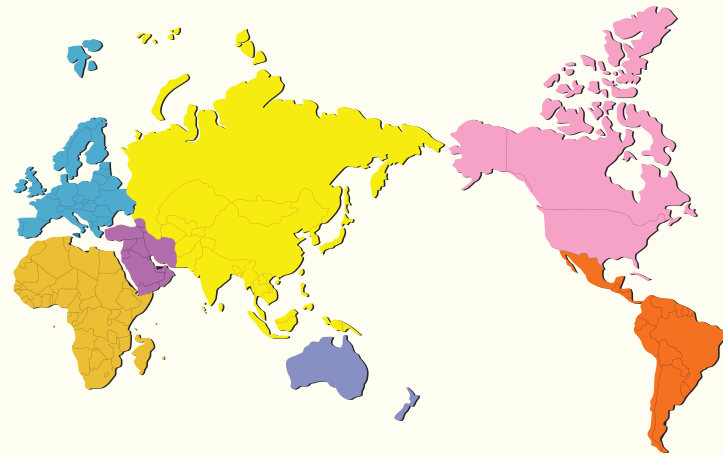
### 세대별 쓸림없는 프랑스·미국의 일자리 정책

전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65.2%)보다 약간 낮은 수준(64.4%)으로 프랑스(64.1%)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는 그리스(49.3%)와 스페인(54.8%)뿐이다. 최근에는 저성장·고령화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특히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고착화되면서 정부와 국민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OECD 국가 고용률 ]



연도별 고용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그리스	60.1	61	61.4	61.9	61.3	59.6	55.6	51.3	49.3
스페인	63.6	65	65.8	64.5	60	58.9	58	55.8	54.8
프랑스	63.7	63.6	64.3	64.8	64	63.9	63.9	63.9	64.1
한국	63.7	63.8	63.9	63.8	62.9	63.3	63.8	64.2	64.4
OECD	65.3	66	66.4	66.4	64.7	64.5	64.8	65	65.2
미국	71.5	72	71.8	70.9	67.6	66.7	66.6	67.1	67.4
핀란드	68.4	69.4	70.3	71.1	68.7	68.2	69	69.4	68.9
일본	69.4	70.1	70.9	71.1	70.5	70.6	71.1	70.6	71.7
영국	71.8	71.6	71.5	71.5	69.9	69.5	69.5	70.1	70.8
캐나다	72.4	72.8	73.5	73.6	71.5	71.5	72	72.2	72.5
호주	71.5	72.1	72.8	73.2	72.1	72.4	72.7	72.4	72
덴마크	75.9	77.4	77	77.9	75.4	73.4	73.2	72.6	72.6
독일	65.5	67.2	69	70.1	70.3	71.1	72.5	72.8	73.3
스웨덴	72.3	73.1	74.2	74.3	72.2	72.2	73.6	73.8	74.4
네덜란드	73.2	74.4	76	77.2	77	74.7	74.9	75.1	74.3
노르웨이	74.8	75.4	76.8	78	76.4	75.3	75.3	75.8	75.4

출처 : OECD 「<http://stats.oecd.org/>」 2014. 09

프랑스의 일자리정책 1)

프랑스는 고용정책의 중요방향을 전체 실업률(10.9%)의 2배가 넘는 청년실업률(26.1%)의 고용 개선에 두고 있다.



주요국의 실업률 (원계열, %)

	한국 (15. 2월)	미국 (15. 2월)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실업률	4.6	5.8	3.5	4.9	10.9	23.9
청년층	11.1	12.2	6.6	6.9	26.1	51.2

일본·독일·프랑스·스페인은 15. 1월 자료이며, 독일·프랑스·스페인 실업률은 15~74세임  
한국(15~29세), 미국(16~24세), 일본·독일·프랑스·스페인(15~24세)  
출처: 통계청, 「2015년 2월 고용동향」

프랑스 중앙정부는 청년층 고용을 위해서 미래계약(contrat d'avenir), 세대계약(contrat de génération)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기업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주요한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1) 미래계약

미래계약(emploi d'avenir)은 학력이 없거나 학력이 부족하여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직업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직업세계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미래계약 체결 자격요건은 16세부터 25세까지의 청년층이어야 하며, 학위가 없거나 부족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연령은 30세까지 연장된다.

미래계약을 통해 고용을 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분야여야 한다. 환경 분야, 정보통신 분야, 사회적 경제, 사회의료, 개인서비스, 사회문화적 활동, 관광 등 분명히 사회적 효용을 가진 활동을 하거나 환경보호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충원이 가능한 활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협회, 비영리 조직, 공공기관, 지방자치체 등이 된다.

계약의 형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무한기

1) 윤윤규 외, 「지역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년 5월

간 계약이거나 1년에서 3년의 유한기간 계약이다. 또한 해당 직종에 대한 훈련도 제공되며, 계약기간 동안 습득한 경험에 대한 인정도 한다.

미래계약을 통해 청년층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3년 동안 최저임금의 75%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원된다.

## 2) 세대계약

세대계약(contrat de génération)은 사업체에서 모든 세대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청년층을 보다 안정적인 무한기간 계약을 통해 고용하는 것, 둘째, 고령층을 유지하거나 고용하는 것, 셋째, 세대 간에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되는 것이다.

세대계약의 고용형태는 26세 미만의(장애가 있는 경우, 30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무한기간 계약이어야 하며, 57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 유지가 있어야 한다. 근무 형태는 전일제 근무 혹은 시간제 근무 모두 가능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일제 근무시간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각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청년 신규 고용 1명에 대해 2,000유로, 고령층 고용 유지 1명에 대해 2,000유로 등 합하여 매년 4,000유로를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대계약을 통해 고용을 할 수 있는 고용주는 민간의 모든 사업체를 포함하지만,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따라 제도의 적용은 달라진다.

50인 미만 사업체가 세대계약을 맺으면 특별한 조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청년층·고령층 고용현황 분석과 단체협약 또는 행동계획의 작성·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체협약 또는 행동계획에는 앞으로 청년을 얼마나 고용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 3) 창업지원

프랑스는 취업지원정책과 더불어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창업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창업재개신지원(nouvelle aide aux créateurs et repreneurs d'entreprise : NACRE) 제도는 구직자, 최저소득지원 수혜자 등이 기업을 창업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국가, 세무당국, 공탁제도 등을 통해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3단계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사업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것을 돕는 것이며, 둘째는 재무구조를 만들고 은행과 관계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며, 셋째는 사업체가 영업을 시작하고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은행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연대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다. 이러한 물적 지원 이외에 지원대상자는 사업자 등록 이후 3년간 국가 혹은 세무당국이 인증한 동반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이자 대출되는 금액은 1,000유로에서 10,000유로이며, 기한은 1년에서 5년까지이다. 은행대출과 연대자금 대출도 무이자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대출을 위해서는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미국의 일자리정책 2)



뉴욕 주 노동부는 기업들의 다양한 고용 창출·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OJT(On-the-Job Training), Tax incentive, FBP(Federal Bonding Program) 등이 있다.

1) OJT(On-the-Job Training) 프로그램

OJT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전일제 일자리에 숙련 또는 숙련되지 않은 구직자를 고용하여 훈련시킬 경우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고 임금(초기 임금의 50%까지)과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고용주가 OJT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상	적용 요건
고용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 주에 입지한 사업장으로 뉴욕 주의 거주자 고용</li> <li>· 고용 후 6개월 내에 교육훈련 완료</li> <li>· 교육훈련 후 최소 1년간 해당 근로자 고용</li> <li>· 전일제(주 35시간 이상) 일자리로 시간당 10달러 이상의 임금 지급</li> <li>※ 파트타임(주 35시간미만)이나 계절적 일자리, 특수한 학위 및 자격증등이 요구되는 직업 제외</li> </ul>

지역의 윈스톱고용센터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먼저 해당기업이 요구하는 숙련수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해당기업이 현재 필요한 숙련수준을 이미 갖춘 인력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당장은 필요한 숙련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할 것인지를 타진한다. 현재로는 기업의 숙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OJT를 통해 새로이 채용된 인력에 대해 기업특수적인 숙련습득 기회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있다면, 윈스톱고용센터는 지역 내 실직자, 일시해고자, 장기실업자 현황을 파악한 다음 해당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소개·알선해 준다.

2) 윤윤규 외, 「지역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년 5월

대부분의 윈스톱센터, 수혜 기업 및 근로자들은 OJT 프로그램이 지역 기업의 고용유지·창출에 매우 유익한 수단이며 그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력 수요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OJT를 통해 훈련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기업특수적인 숙련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기업특수적 숙련 획득을 통해 해당기업에서 고용 연속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OJT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 목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OJT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 Tax incentive 프로그램

뉴욕 주 노동부는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경제발전프로그램 및 인력개발프로그램에 걸쳐 다양한 고용기반(employment-based) 조세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방정부 수준의 WOTC(Work Opportunity Tax Credit), 주정부 수준의 WETC(Workers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Tax Credit)가 대표적인 조세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WOTC는 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주에게 2,400 달러까지 연방세금을 감면하여 준다. 대상 근로자는 1,500달러의 WOTC 부분공제를 위해 적어도 120시간을, 2,400달러의 전액공제를 위해 40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주정부 차원의 조세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근로자 대상의 인센티브인 WETC(Workers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Tax Credit)가 있는데, 2년 내에 고용 중에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은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2,100달러 이상 뉴욕 주의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2년차 고용 시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며 WOTC와 결합할 수 있다.



### 3) FBP(Federal Bonding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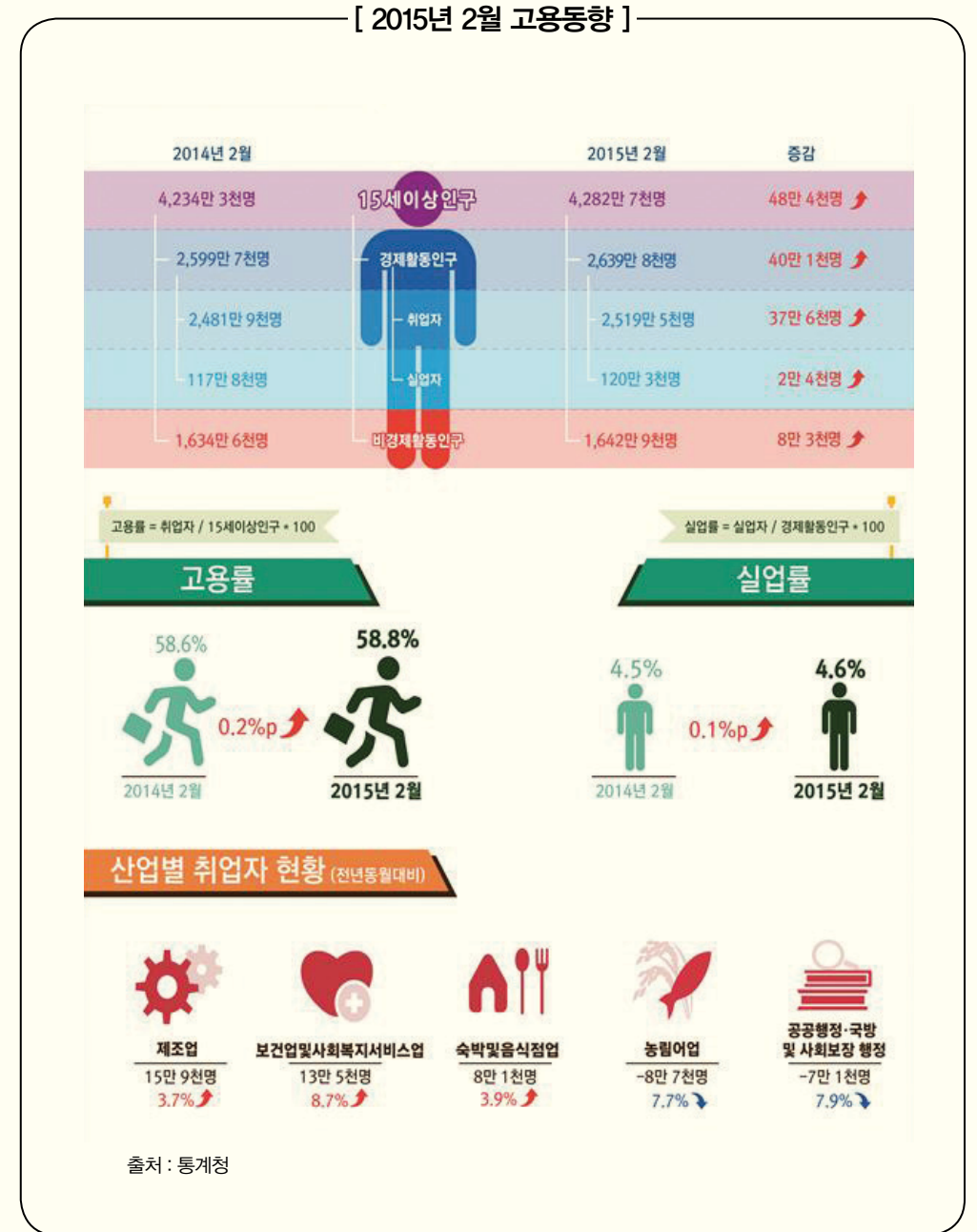
FBP(Federal Bonding Program)는 기업이 신용불량자, 전과자 등 '고위험' 구직자를 고용했을 경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일종의 기업보험 프로그램으로, '고위험' 구직자가 일자리를 얻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FBP를 통해 채용되는 근로자는 세금이 자동 징수되는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전일제, 파트타임, 정규직, 임시직 등 어떠한 고용형태도 가능하다.

## 나가며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 및 미래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고용률이 하락하고, 각국은 다양한 고용지원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와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임금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조세감면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고용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청년 및 고령자들의 고용촉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 문제가 청년층뿐 아니라 노인세대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세대 간 일자리 경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모든 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프랑스의 세대계약은 일자리 부족으로 세대 간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이나 노인빈곤 해결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단시간·저임금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기본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여 인력의 쓸림현상을 막고, 업종별 임금격차도 줄여 특정 업종에 대한 일자리 선호현상을 줄이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을·논·하·다  
선진사례 2

## 청년일자리의 작은 불씨 소셜창업

박기범 (사회적 기업 에코버튼 대표)

누구나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물건 중 하나는 '스마트폰'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스마트폰 덕분에 개인에게 수많은 기사와 정보가 제공된다. 요즘 하루에 한 꼭지씩 포털 메인기사에 올라오는 기사가 '청년일자리'에 대한 기사이다.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서른 중반이니, 법적으로도 사회적 기준으로 청년에 속한다. 기성세대들은 청년일자에 대한 기사를 보며 추억에 잠길 수도 있겠지만, 2015년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조금 과장해 말한다면, 가족의 부고를 전달받은 기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청년이 만나 죽음을 계획하고, 차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사를 볼 때 특히 안타까운 이유는, 그 청년들을 그런 선택으로 몰고 간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와 '직업' 선택의 좌절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 때문이다.

굳이 한국사회의 청년일자리 현실을 다양한 데이터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꿈과 직업을 한 길 위에 놓을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의 일자리를 구분해 본다면, 대략 기업이나 기관에 취직하려는 청년, 공무원이나 교사를 준비하는 청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전문영역 프리랜서 직업을 꿈꾸는 청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야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다. 창업을 권한다는 것은 어려운 제안이다. 창업은 항상 실패의 우려를 담고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회경험이 적고 이제 피기 시작하는 꽃인 청년에게 그러한 일자리를 권한다는 건 창업을 해본사람이나 안 해본 사람 모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창업을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창업은 자신과 사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같이 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그릇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사회와 또 다른 사람까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반 창업보다는 '소셜창업'을 청년의 일자리로 제안하려고 한다.

### 소셜창업이란?

'사회혁신기업, 사회혁신기구, 사회창의기업,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사회적 협동조합 등 그 어떤 방법이나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 다만 창업을 하는 이유나 목적이 개인의 부와 명예가 아닌 사회동반 의지가 있는 창업'을 소셜창업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삶이 다양해지면서 사람과 사회 간에 이격이 생겨나고 있다. 그 이격을 정치나 지방자치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개개인의 일자리와 삶의 목표에서부터 고려되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과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한발자국씩 뒤로 걸어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는 다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 고리로 되돌리고, 청년 일자리의 대안까지 가능한 '소셜창업'이 앞으로 더욱 가치 있는 시도로 여겨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와 제도권에서는 청년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소셜창업 사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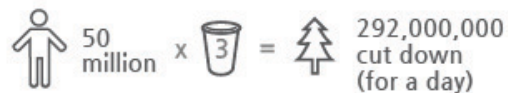
환경을 지키는 디자인을 만드는 소셜 벤처  
에코준(ecojun)컴퍼니

# PUBLIC\* CAPSULE



▲ 에코준컴퍼니의 대표적인 제품: 퍼블릭 캡슐 (사진: 에코준컴퍼니 홈페이지)

# original green c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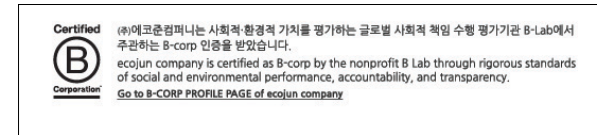


- Material** : 생분해(옥수수) 플라스틱(PLA)  
biodegradable corn starch(PLA)
- Packaging** : 100% 재생지  
100% recycled paper
- Size** : 83mm x 122mm

▲ 주요 소재인 생분해 플라스틱 PLA에 대한 설명 (사진: 에코준컴퍼니 홈페이지)



▲ 세계적 디자인상 수상, (사진: 에코준컴퍼니 홈페이지)



▲ 소셜 벤처의 가치를 인증하는 국제권위인증 B-corp 달성 (사진: 에코준컴퍼니 홈페이지)

에코준컴퍼니는 환경 생태적 윤리를 기본으로 그린디자인을 개발하는 회사로써, 우리의 다음세대가 살아갈 지구 환경에 작은 보탬이 되는 기업 활동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는 석유플라스틱이 아닌 생분해(옥수수)플라스틱인 PLA를 적용하고 있는데, PLA라는 소재로 제품을 만드는 일이 아직까지 석유플라스틱 성형제작과 같은 높은 성공률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회사는 끊임없이 이 소재를 활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몇 년간의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감내하며,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완성도 높은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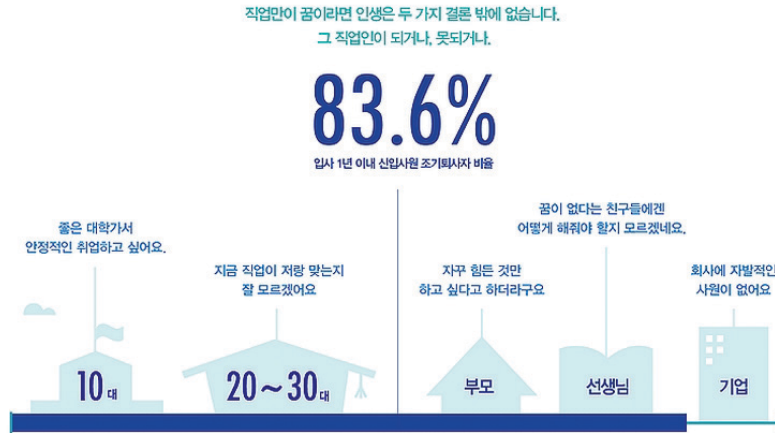
제품만으로도 반환경적인 악순환을 보다 환경적인 선순환으로 바꾼 사회적 신창업인데, 더 나아가 수익금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의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아프리카 우물 프로젝트'에 후원하고 있으니 사회적 신호과는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준서대표 1인으로 시작한 이 회사가 현재 4~5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환경디자인과 제품, 프로젝트사업을 넓혀간다면 더 많은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로 성장할 것이다.

청년 소셜창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소셜창업 사례2

미래세대 꿈 문화 기획사 소셜벤처  
모티브하우스(motive house)



### 자신만의 가치창조력을 키우는 동기부여 프로그램

▲ 꿈 설계 프로그램 소개 (사진: 모티브하우스 홈페이지)

모티브하우스는 '꿈 문화 기획자'라는 창의직업으로, 직업과 결과만이 아닌 가치를 담은 진로와 꿈으로 인생을 기획하기 바라는 미래세대를 위해 '꿈 설계'를 돕는 일을 비즈니스로 하는 소셜창업의 한 사례이다.

현재 청년과 청소년에게 '본인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10명중 8명은 '미래직업'을 이야기 할 것이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가 꿈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그 직업을 이루었다면 꿈을 실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의 꿈은 직업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모티브하우스의 서동호대표는 "자신이 경험하고 자라면서 꿈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치가 담긴 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듯 이 회사는 사람의 생활방식인 의식주휴미락을 넘어 '꿈'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회창의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모티브하우스 소개영상 (사진: 모티브하우스 홈페이지)



▶ 꿈 설계 프로그램 진행 (사진: 모티브하우스 홈페이지)

서비스업이란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과 달리 사람인 개인이 스스로 해내기 어렵거나 번거로운 일을 대행하거나 돕는 비즈니스 분야를 말한다. 모티브하우스라는 소셜 벤처가 소셜창업을 한 이래로 청소년, 청년이 어렵고 막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꿈 설계'라는 서비스업을 만들었고, 보다 건강한 꿈을 갖고 사는 미래세대가 사회에 이로움을 되돌려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와 더불어 대표 혼자 창업한 회사가 성장하여 6명의 '꿈문화기획자'라는 직업을 만들어냈다. 꿈 설계라는 영역이 국어, 영어, 수학만큼 중요한 배움이 된다면 모티브하우스의 성장과 그에 따른 일자리는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두 가지 소셜창업의 대표 사례를 보았다. 지면상의 문제로 두 가지 사례만 소개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소셜창업은 여러 권의 책으로 낼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함께 사람과 사회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이 글을 보는, 소셜창업을 경험해보지 못한 기성세대는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런 사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독려한다면 말이죠.”라고 답할 수 있다.

소셜창업 5년차 에코준컴퍼니는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넘어 유럽의 디자이너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소셜창업 6년차 모티브하우스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의 지자체, 학교, 기관, 기업과 함께 꿈을 설계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마무리 글로 희망제작소 이원재소장의 글을 빌리면,

위대한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필요하다.

(중간 생략)

위대한 기업이 탄생하려면 이에 걸맞은 생태계가 필요하다. 지금 한국 사회적 경제는 아직 제대로 된 생태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영리기업과 비교하면 턱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희생하며 싸우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혁신적 시도가 어떻게 출구를 찾고 확산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혁신기업들의 혁신성을 꺾는다. 당장 생존하기 위해 실험을 포기하게 만든다. 인수합병이나 상장 같은 실리콘 밸리식 해법이 사회적 경제에 맞게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곳에서 일할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고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필요한 환경은, 영리기업에 맞춰져 있는 소비자와 금융사들의 변화다. 진정으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일은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이나 소비 같은 환경 변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은 결국 공공부문에 있다. 금융이나 소비는 많은 경우 공공부문이 조성한 인센티브와 인프라에 맞춰 변화한다.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 공론 및 법제도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설계하는 지원시스템이 사회 인센티브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성한다.

위대한 정치거나 정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대한 기업이 많이 나오게 하면 그것이 좋은 정치, 좋은 정부다. 위대한 기업은 적절한 생태계에서 나온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심은 이런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에게서는 세상에서 가장 앞선 곳에서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들의 발표에서는 호기심과 생동감이 넘친다. 사회적 경제를 혁신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런 에너지다. 월마트 매장을 어슬렁거리는 최고경영자에게서는 그 모든 포화 속에서도 가장 싼 물건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서 하나의 제품이라도 더 팔고 말겠다는 끈기가 묻어난다. 사회적경제가 현실적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것은 그런 맷집이다. 위대한 사회적경제가 탄생하기 위한 필요한, 아주 솔직한 조건들이다.

지금 청년 일자리와 소셜창업이라는 목표를 지역에서 세우고 있다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조언이다.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의 사회문제를 악순환고리에서 선순환 고리로 바꾸는 소셜창업의 활성화와 지원에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가? 묻고 싶다.

출산율이 저조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앞에 출산율을 높이고 일과 육아가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가치판단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듯, 청년들이 꿈을 꾸고 사회와 연결된 직업을 만들고, 다시 그 직업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동시에 지역사회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선순환구조로 바꾸는 소셜창업에 대한 지원과 제도마련에 고민은 필요 없다.

위 글에서 나온 표현처럼 ‘위대한 정치거나 정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대한 기업이 많이 나오게 하면 그것이 좋은 정치, 좋은 정부다’

일자리라는 세 글자만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해결책은 없다.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와 사회, 일자리와 미래를 같이 놓고 바라봐야 작은 해결책이라도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자생하고 있는 소셜창업가와 소셜기업들을 잘 살펴보고, 그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좋은 바람과 좋은 장작을 만나 좋은 불, 좋은 숲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할 때이다.

# 수원시의 일자리 창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낙수효과의 진실**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장을 만나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연다. 경제단체장들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말하고 대통령은 경제단체장들의 이야

기를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법인세 감면, 규제완화 등을 약속한다. 대기업들에게 돌아갈 당근을 챙겨준다. 그 근거는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 down effect) 이론이다.

낙수효과란 그릇에 물이 계속 떨어지면 그릇의 양을 초과하는 물은 그릇을 넘쳐서 흘러내리게 되고 흘러넘친 물은 그릇뿐 아니라 주변도 적시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릇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잘 되어야 투자와 고용이 증대되고 이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경제정책인 'MB노믹스'의 이론적 근거가 낙수효과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구호 아래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지향했다.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을 표방하는 747정책을 위해서 100조원에 가까운 부자감세를 단행했고, 그 결과 147조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했다. 국가채무 변제의 몫은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왔다. 법인세를 인하하며 재벌과 대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지만 재벌들은 법인세 인하기로 인해 거둔 이윤을 생산에 재투자하는 대신 부동산 투기나 현금보유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물이 고일수록 그릇의 높이는 높아만 가면서 물이 그릇을 넘쳐 흘러내릴 기회조차 없었다.

그릇이 높이 올라가는 동안 대한민국의 가계 빚은 1천조 원을 넘었다. 결국 낙수효과로 무장된 성장위주의 정책은 양극화 심화와 서민경제 파탄으로 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MB노믹스'의 이론적 근거인 낙수효과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에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소유구조, 유인체계는 미국의 대기업과 다르다. 경제학적으로 낙수효과 이론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다른 고민 없이 그런 정책을 추진한 것은 현실감각이 결여된 결

정이었다. 이는 환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의 진료 없이 동일한 질병에 동일한 약을 처방한 것과 같은 꼴이 되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2014년 10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5)에서 한국은 2013년(7위)보다 2단계 상승한 5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세계은행이 개별 국가의 기업환경을 고려한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기 공급(2→1위), 통관행정(3→3위), 법적분쟁 해결(2→4위) 등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전기 공급'이다. <표 1>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일반 가정용 전기보다 산업용 전기가 17.1% 저렴한

데, 전체 전기사용량을 보면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41.4%p 더 많다. 산업용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업종은 철강과 석유화학인데 이들은 모두 대기업의 사업영역이다. 전기요금 체계를 살펴보면 결국 서민들의 전기요금을 저우어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보전해주는 형국이다. 법인세 감면도 다르지 않다. 2008 ~ 2012년 법인세 신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기업 중에서 전체 0.3%에 해당하는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22조 1천879억 원으로 총 법인세 감면액인 40조 718억 원의 55.4%에 달한다. 법인세 감면은 세수의 부족을 의미하고 부족한 세수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세 인상 등의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

<표 1>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판매단가: 원/kWh, 자료: KEPCO)

종별	적용범위	요금체계	판매단가(지수)
산업용 (55.3%)	광업, 공업용	계절별 차등(6 ~ 8월 고율) 300kW이상 시간대별 차등	106.83(96)
일반용 (21.9%)	공공, 영업용	계절별 차등(6 ~ 8월 고율) 300kW이상 시간대별 차등	129.75(117)
주택용 (13.9%)	주거용	6단계 누진요금제	125.12(112)
심야전력 (4.1%)	갑(축열식 난방)	심야시간(오후11시~오전9시)	겨울:76.8, 기타:55.4
	을(축냉식 냉방)		심야시간(오후11시~오전9시) 겨울:62.3, 기타:45.2
농사용 (2.4%)	농업, 어업용	단일요금[농사용(갑), 농사용(을) 저압]	47.31(43)
교육용 (1.7%)	학교, 박물관 등	계절별 차등(6 ~ 8월 고율) 1,000kW이상 시간대별 차등	114.15(103)
가로등 (0.7%)	가로, 보안등	단일요금	113.39(102)
평균			111.28(100)

**자본주의의 원류는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저작 '국부론'(1776)은 규제와 같은 정부의 개입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자들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하며 큰 정부의 그림자를 지워야한다는 논리를 설파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를 자본가의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부분을 자본가들이 차용했지만 실제로 아담 스미스는 자본가의 편을 들지 않았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 추구는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 허용된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누구도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평등이라는 틀 안에서 부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경영학과 가빈 케네디(Gavin Kennedy) 교수는 "아담 스미스는 법으로 빈민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정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해요. 하지만 고용주는 그걸 이용할 수 있죠. 아담 스미스는 '상업사회가 답이다. 일하게 하라'고 했어요. 일이 없으니 직업을 주라고요. 일을 하면 수입이 생기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니까요."<sup>1)</sup> 라고 말했다. 재벌과 대기업을 옹호하는 주류 경제학의 도구로 사용된 '보이지 않는 손'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차별적인 요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가나출판사, 2014, P.298

## 빈익빈 부익부는 왜 발생하는가?

**불편한 이름 칼 마르크스** 누군가 당신에게 '지난 1천 년간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문학, 사학, 철학을 등한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곤혹스러워 할 것이다. 2008년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지난 1천 년간 가장 위대한 철학자와 '지난 1천 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을 뽑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칼 마르크스'와 그의 저서 『자본론』이 뽑혔다.

경제학자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조사결과를 의아해 하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냉전체제라는 이념적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르크스에 대해서 공산주의를 창시한 매우 나쁜 인물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비효율적 생산체제인 공산주의의 원류라고 치부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류 경제학으로 배운 신자유주의 사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논의는 경제학자들만의 이야기로 남겨두고, 여기에서는 유럽 사람들이 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열광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항상 가난할까?** '취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왜 항상 가난할까?' 그리고 '왜 놀고먹는 자본가들은 점점 부자가 될까?' 가장 상식적임에도 이해가 잘 안되는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한 것은 『자본론』 1권이다. 마르크스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부품화 되어버린 노동자들의 삶 때문이었다. 마르크스는 인본주의의 자리를 대신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분석하기 위해 『국부론』을 수백 번 탐독했다. 그 후 15년이라는 시간의 공을 들여서 빚어낸 역작이 『자본론』이다. 『자본론』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가 '상품'(재화)이다. 마르크스는 상품은 유용성의 여부를 따지는 '사용가치'와 거래의 여부를 따지는 '교환가치'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정의한다. 이런 상품은 노동을 통해 생산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주목한 것은 상품 생산의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본가의 이윤 획득이었다. 고정비용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인 재료비이고 가변비용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노동력을 뜻한다. 노동력을 가변비용이라고 가정한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노동력의 대체가 쉽다는 것이다.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생산과정일 경우 노동력의 대체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가의 요구를 노동자들이 거절할 수 없다. 이는 임금의 하락이나 노동시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둘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생산시스템이 자동화 되면서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생산의 노동비용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변비용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의 요인 때문에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품은 대량으로 생산되지만 노동자들은 상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어지므로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공멸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증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2015.3)에 의하면 2014년 노동생산성은 2007년에 비해 12.2% 증가했으나 실질임금은 4.3%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의 생산량이 3만km 증가했으나 임금은 1만km 증가한 것이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GDP로 나타낼 수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GDP는 \$56,7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은 23위에 그쳤으며 OECD 국가의 근로자 1인당 GDP의 평균은 \$70,222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짚어 볼 것은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상승률의 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한국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2007~2012년 사이 한국의 노동생산성·실질임금 상승률 격차는 10.3%p였다. 이는 아일랜드(13.8%p), 그리스(12.3%p), 포르투갈(11.2%p), 스페인(11.7%p) 등 유럽의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겪은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와 헝가리(11.7%p) 다음으로 높은 격차다.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상승률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아껴 저축으로 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국가경쟁력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기업저축률은 OECD 국가 중 1위(2013년 21.5%)를 기록했다. 기업저축률은 2007년까지 15% 내외로 10위 정도였지만 2008년 16.8%로 7위로 상승한 이래 계속 올라 2011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 수원시의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반면 가계의 저축률은 OECD 국가 중 20위(2013년 3.8%)에 머물렀다. 이런 '임금 상승 없는 성장' 현상이 지속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면서 내수 위축, 기업 수익 악화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위기로 작용하게 된다.

**앵겔 계수** 경제학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준을 잡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앵겔 계수'(Engel coefficient)는 대단한 직관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양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일반 가계마다 식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반면 가계의 소득은 각기 다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가계의 식비를 소득으로 나눈 수치를 앵겔 계수라고 한다. 가계의 소득이 높을수록 앵겔 계수는 낮아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앵겔 계수는 높아진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가계의 앵겔 계수는 100이 된다. 반면 재벌 총수의 앵겔 계수는 아마도 0.000001 정도가 될 것이다. 2010년 대한민국의 소득 하위 20%의 앵겔 계수는 22.5, 소득 상위 20%의 앵겔 계수는 12.4로 나타났다.

사회의 부가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면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반면 여러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부를 공유한다면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돌고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얼마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장한 최저임금 7% 인상안은 의미가 있다.

**대기업 의존도 낮추기** 불과 4~5년 전만 해도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핵심 경제정책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의 일자리 및 세수 확보였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들은 경기도의 16중 규제로 인해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열기가 식고 있다.

삼성전자의 수원사업장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오는 9월부터 서울의 R&D 센터로 이동하여 8천 명의 고급 인력이 수원을 떠날 예정이다. 이런 현상은 대기업들이 지자체와는 별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윤에 맞추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수원시는 이제부터라도 대기업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수원시는 대기업을 유치해서 그들에게 제공할 대지도 없을 뿐더러 수도권 규제의 중심에서 있기 때문에 수원시의 신규 기업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관련 지방세는 신장률이 불안정하고 지역경제성장과의 연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가 지방세수로 연계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수원에 관심을 갖고 수원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길 바란다면 우리로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기업유치만 바라보면서 큰 기대를 거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수원시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원한다면 광고 테크노파크에 조성된 R&D 집적지에 대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일자리 창출 시대** 바야흐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120만 명의 배후 인구가 거주하는 수원시는 자생적 경제 형성에 있어서 큰 장점이 있다. 기업유치에 의존하지 않고 수원시의 자생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3가지 제언을 덧붙인다.

첫째, 강소기업 육성이다. 고색동에 위치한 수원산업 1,2,3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최상의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 수원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향후 설립예정인 첨단산업진흥재단을 통해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속한 구인구직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수원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복지예산 활용이다. 중앙 정부, 지자체 모두 총예산의 1/3은 복지관련 예산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예산은 소모성이라고 생각한다. 사고를 전환하면 복지예산을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수원시는 복지예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여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마을 경제 자립 사업이다. 수원시의 특화된 사업 중의 하나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수원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로 주민자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서울의 성미산 마을 만들기 사업처럼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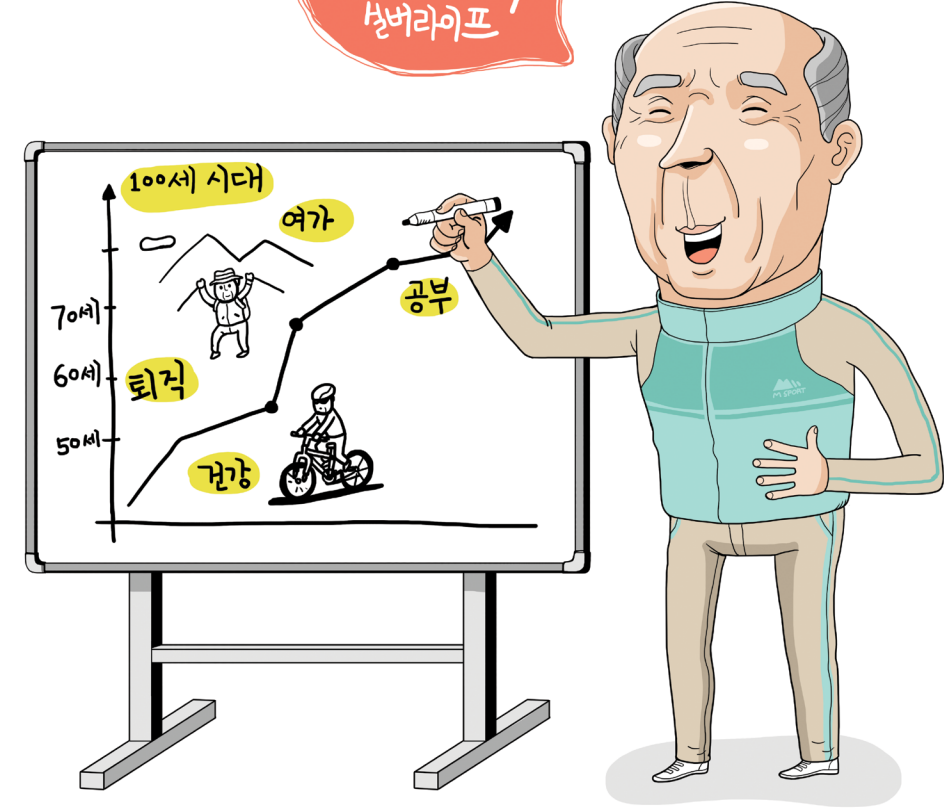
경제자립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별로 없다. 수원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경제자립형 모형을 추진하는 곳도 있지만 체계가 분산되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후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창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마을 경제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수원시의 각 마을 경제가 전통시장과 상호작용하여 수원시의 원활한 경제흐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세 가지의 제언은 앞서 기술했던 대기업의 낙수효과 전무, 노동가치의 인정, 분배 시스템의 정착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등 한국 경제를 진단한 후에 이끌어 낸 결론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칭송되는 아담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다.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1인당 GDP가 얼마이고 지난해에 몇 %의 경제성장을 했고...이런 수치들보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경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원하는 수원시민 누구나 일자리를 얻으면서 수원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립형 경제 도시로 거듭나 모든 수원시민들이 경제 활성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고문헌>  
 '자본주의', EBS 다큐 프라임, 가나출판사, 2014 초판 13쇄  
 '노동생산성 12% 늘 때 임금상승은 4%', 국민일보 이 슈분석, 2015. 3. 16  
 '지자체 기업유치노력, 지방세 연계 필요', 경기개발 연구원, 2014.10

제2의  
 人生 계획  
 생버라이프



수·원·을·논·하·다  
 정책제안

고령사회, 수원시민의 인생 2모작 지원을 위한 제언

이용국 (수원시정연구원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6%로 2위인 스위스의 2배가 넘고, OECD 평균보다는 무려 4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성숙한 선진국들에 비해 공적연금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노후불안이 더욱 심각하다. 주요국 노인세대의 주요 수입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 보다 일 또는 자녀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65세 이상 가구주가 44.9%에 불과한 데다,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순으로 조사되어 경기변동에 따른 불확실성마저 큰 상황이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5%로 OECD 평균(12.7%)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대비 부족을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OECD 주요국의 노인빈곤율 (%)

한국	스위스	이스라엘	칠레	일본	영국	독일	OECD 평균
48.6	24.0	20.6	20.5	19.4	10.5	9.4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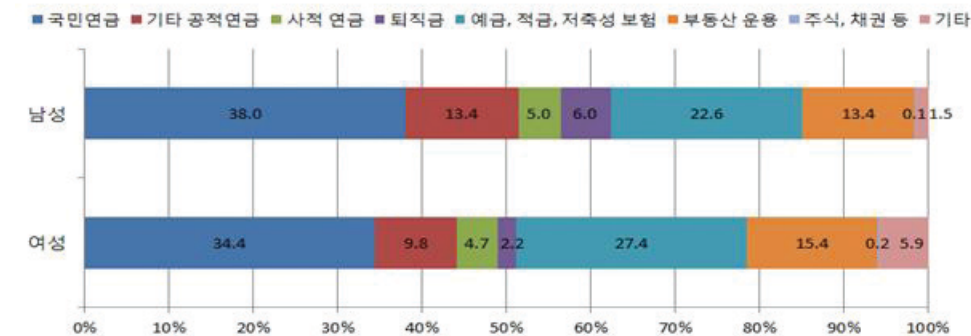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통권 제120호」, 2015

주요국 노인세대의 주요 수입원 (%)

	연령	일	공적연금	사적연금	자녀의 지원
한국	65~69세	42.5	11.2		23.1
	한국70~74세	29.8	11.8		37.1
일본	65~69세	24.3	69.0		
	일본70~74세	13.9	77.5		
미국	65~69세	25.4	54.5	12.9	
	미국70~74세	10.8	62.6	15.9	
독일	65~69세	5.6	86.3		
	독일70~74세		85.0		
스웨덴	65~69세	8.1	79.6	5.6	
	스웨덴70~74세		88.8		

주 : 주된 수입원을 하나만 고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 빈칸은 5% 미만을 의미  
 자료 : 第7回高齢者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2010), LG경제연구원(2013) 재인용

65세 이상 가구주의 노후 준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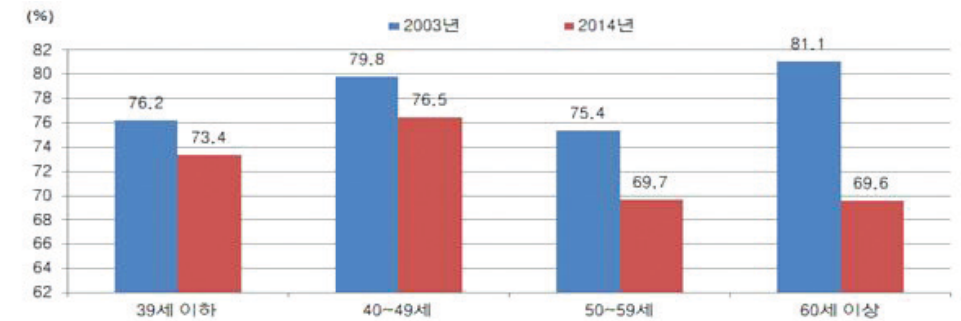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2014

이처럼 노후가 불안하다 보니 고령층의 씀씀이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전국단위 가계수지 조사가 처음 실시된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성향이 줄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에는 전체 연령계층 중에서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해 향후 기대소득에 대한 고령층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최저수준의 출산율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기반과 경제 활력 약화, 저축과 투자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사회적 부양비용 증가에 따른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증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재앙 수준의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평균수명 연장,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프랑스보다 6배, 미국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1980년에 26세였던 우리 국민의 평균 연령이 올해 처음으로 40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40년엔 50세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노후부양에 대한 인식마저 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는 2002년 70.7%에서 2012년 33.2%로 감소한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19.5%에서 52.9%로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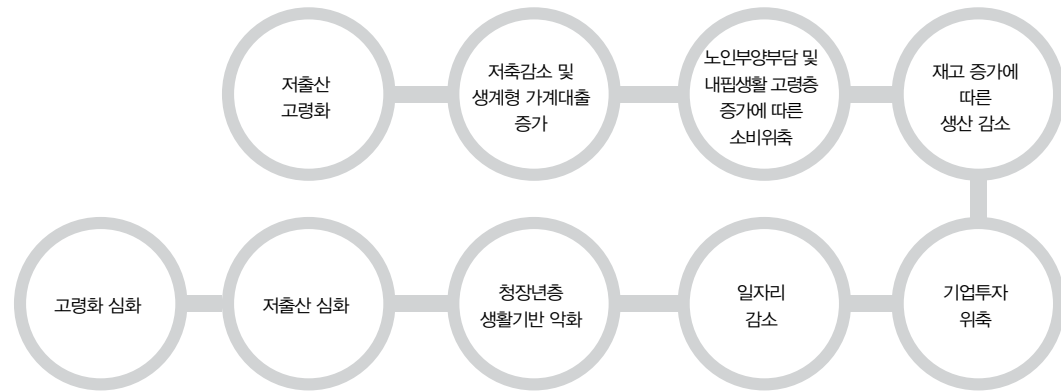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출처 : 통계청,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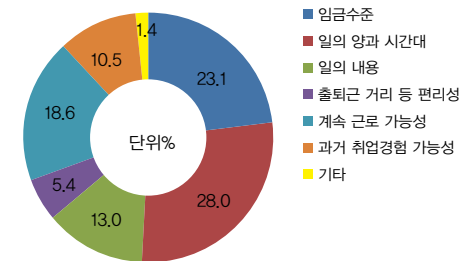
국가	고령인구 비율 도달 연도			소요 연수 (년)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영국	1929	1976	2026	47	50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캐나다	1945	2010	2024	65	14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호주	1939	2012	2028	73	16
스웨덴	1887	1972	2014	85	42
노르웨이	1885	1977	2024	92	47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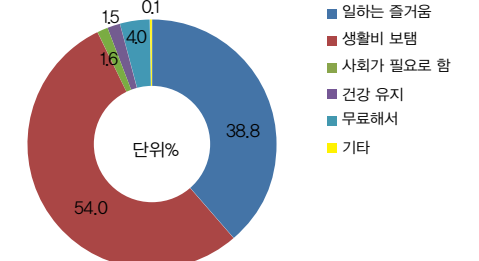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여건과 취업을 원하는 55세~79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구직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고령층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수원의 사정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결과에 따르면, 수원의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전국 15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만명에 달하는 수원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게 되면 향후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생활안정 기반확충을 위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자리 선택기준 (55세~79세)



자료 :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2014

취업을 원하는 이유 (55세~79세)



자료 :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2014

수원시는 그 동안 일자리 공시제, 창업지원센터, 시니어 비즈플라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민선 6기에 들어와서도 '3대 목표 9대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이 '알짜일자리 확대'일 정도로 일자리 시정을 중시하고 있다. 향후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정 누수가 없도록 '일자리 전달 체계'를 면밀히 정비해야 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동안 사업추진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사업내용의 유사·중복성 등에 따른 낮은 효율성과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한계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수원에는 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일자리센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수원 고용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분산적 구조로 인한 운영상의 비효율은 물론 이용자들의 편의도 크게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세대 간의 일자리 경쟁이라는 현실적 딜레마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수원시민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특성과 취업욕구를 반영하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같은 복지 가 곧 일자리가 되는 노인복지형 일자리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중고령층 퇴직자들이 민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경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일자리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령층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간 연계를 효율화하고, 민간 노동시장 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숙련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아돌보미, 아동통학지도 등 지금 당장 시급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재정지원 일자리로 일정부분 충당하는 것은 중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맞벌이 부부의 보육복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고 향후 시장이 확대될 경우 신뢰도와 숙련도를 갖춘 기존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이 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고령층의 구직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원시민 10명 중 7명은 인터넷을 아예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50대 수원시민의 73.9%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나 하루 1시간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에 달한다. 따라서 IT인프라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on-line 구직활동 지원은 물론 중고령층을 위한 off-line의 맞춤형 구직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취업컨설턴트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분야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근로여건 조성을 통한 소득증진 등 수원시민들의 '인생 2모작을 통한 당당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지원서비스, 훈련 및 능력개발, 고용장려금, 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은 0.32%로 OECD 국가 평균인 0.5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주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1/2~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수원시민의 인터넷 이용 현황

구분	이용한다	1일 이용시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6시간 이상
전체	84.1	28.9	33.4	20.0	9.4	3.3	5.1
50~59세	73.9	49.5	32.8	10.0	4.1	0.8	2.8
60세 이상	26.0	57.6	29.8	7.0	3.8	1.2	0.6

자료 : 수원시,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3

OECD 국가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Australia	0.38	0.37	0.33	0.31	0.33	0.32	0.31	0.29	-
Austria	0.6	0.62	0.71	0.67	0.67	0.84	0.84	0.75	0.75
Belgium	0.66	0.68	0.66	0.68	0.7	0.76	0.79	0.86	0.81
Canada	0.35	0.31	0.3	0.28	0.29	0.34	0.33	0.26	0.24
Chile	-	-	-	-	0.11	0.13	0.11	0.1	0.1
Czech Republic	0.24	0.24	0.25	0.25	0.23	0.29	0.33	0.27	0.26
Denmark	1.68	1.57	1.5	1.29	1.33	1.61	2	2.21	2.1
Estonia	0.06	0.07	0.07	0.05	0.07	0.23	0.23	0.23	0.29
Finland	0.97	0.91	0.9	0.86	0.82	0.92	1.05	1.02	1.03
France	0.96	0.9	0.93	0.94	0.85	0.99	1.14	0.93	0.9
Germany	1.08	0.98	0.87	0.75	0.83	1	0.95	0.8	0.69
Greece	-	-	-	-	-	-	-	-	-
Hungary	0.32	0.33	0.34	0.35	0.35	0.48	0.65	0.37	0.73
Ireland	0.66	0.64	0.62	0.64	0.72	0.86	0.93	0.91	-
Israel	-	0.19	0.21	0.19	0.18	0.18	0.18	0.17	-
Italy	0.63	0.56	0.5	0.46	0.47	0.47	0.43	0.42	0.45
Japan	0.23	0.22	0.17	0.18	0.19	0.43	0.28	0.27	0.21
Korea	0.11	0.12	0.12	0.13	0.26	0.48	0.34	0.28	0.32
Luxembourg	0.45	0.49	0.47	0.46	0.46	0.52	0.56	0.62	-
Mexico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Netherlands	1.37	1.28	1.2	1.1	1.06	1.23	1.23	1.13	0.98
New Zealand	0.4	0.37	0.36	0.34	0.34	0.35	0.31	0.28	0.29
Norway	0.77	0.73	0.57	0.55	0.52	0.61	0.63	0.57	0.54
Poland	0.35	0.42	0.45	0.5	0.56	0.62	0.69	0.42	-
Portugal	0.66	0.67	0.59	0.51	0.55	0.77	0.72	0.59	0.49
Slovak Republic	0.24	0.34	0.32	0.22	0.26	0.25	0.33	0.3	0.26
Slovenia	0.24	0.29	0.27	0.2	0.18	0.35	0.51	0.36	0.27
Spain	0.75	0.77	0.79	0.79	0.81	0.86	0.94	0.89	-
Sweden	1.09	1.16	1.23	1.02	0.88	0.97	1.17	1.22	1.33
Switzerland	0.74	0.71	0.62	0.55	0.51	0.59	0.64	0.59	0.57
United Kingdom	0.45	0.42	0.32	0.31	0.34	0.42	0.41	-	-
United States	0.13	0.12	0.12	0.12	0.17	0.16	0.14	0.14	0.12
OECD countries	0.58	0.55	0.53	0.49	0.49	0.58	0.62	0.56	0.57

자료 :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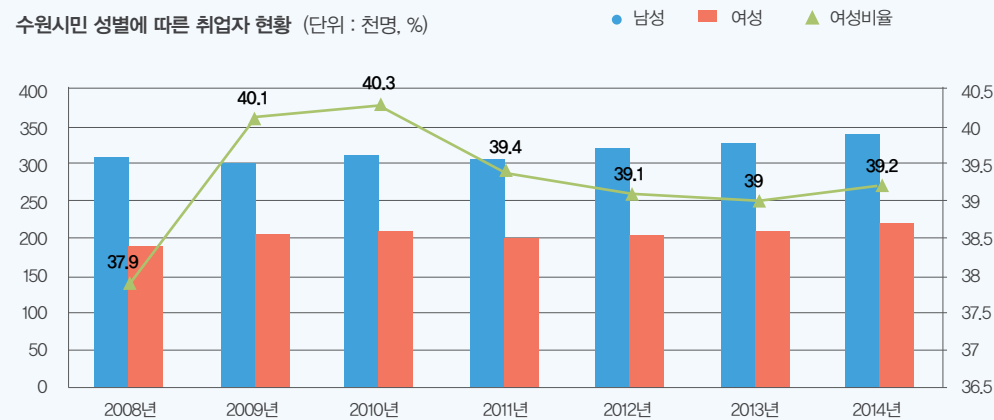
## 지표로 바라보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 “수원시 여성과 노인의 취업 현황 분석”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인문사회 연구부 연구원)

일자리 창출은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되면서 이것이 양극화와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자리는 소득보장을 통해 삶의 보람과 만족을 주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본 글에서는 그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취약계층이라고 여겨지는 수원시 여성과 노인의 취업현황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이슈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원시민 성별에 따른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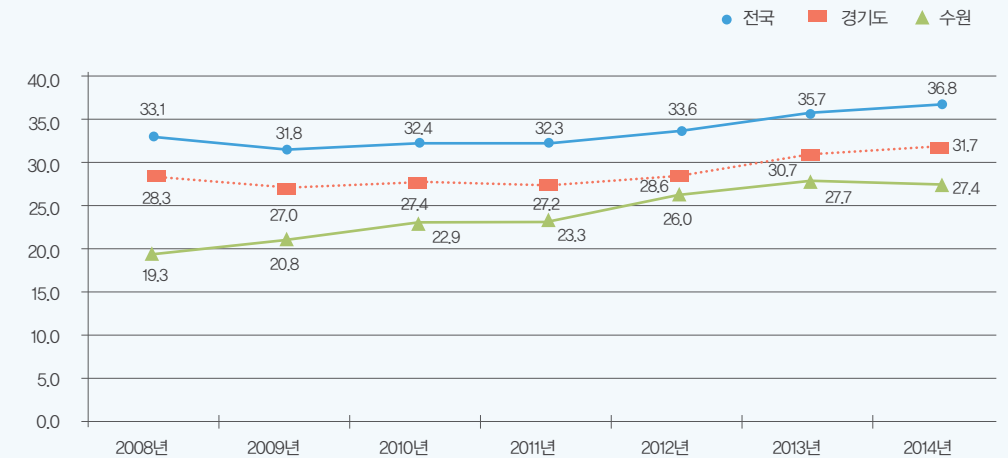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성별에 따른 취업자의 격차	119.6	99.5	100.1	106.4	114.6	118.1	120.6							

주 1) 2008년~2014년 각 1분기 자료

자료 : 통계청, 2008~2014년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 9개도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취업자를 비교한 결과, 매년 남성 취업자가 여성취업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여성의 취업자 비율은 40.3%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취업자 격차는 2010년을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자 현황 (단위 : %)



주 1) 지역별 비교를 위하여 고령자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2008~2014년 지역별 고용조사, 성/연령별 취업자 수

50세 이상 취업자의 비율은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 취업자는 2008년 19.3%에서 2014년 27.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과 경기도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과제 ]

•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일자리 창출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가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여건 그리고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층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자 비율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앞으로 취업자의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일과 양의 시간대, 급여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노인일자리 질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하다.

# 연구리포트

## 수원시 인권실태조사 연구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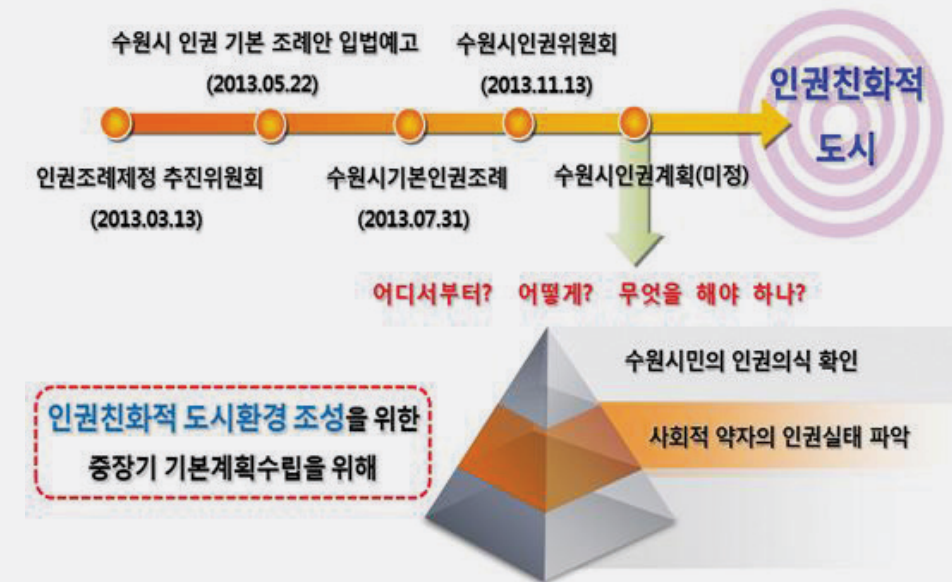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와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인권정책과 달리 수행하는 것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국가의 인권실태와는 달리 각 지역별로 인권에 대한 의식과 욕구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원시민의 인권의식 및 인권향상을 위한 실태분석 및 인권 권리 증진을 위해 연구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나아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수원시민이 인권에 대하여 갖는 의식·태도, 평가 및 경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수원시 인권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필요성



## 2. 일반시민 설문조사

수원시민이 체감하는 인권의식을 파악하고, 인권차별 및 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만 20세 이상<sup>1)</sup>의 수원시민 총 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할당하였다. 설문조사는 2주(2014.6.30. ~ 2014.7.11.) 간에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1:1 대인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로 수행하였다.

〈표 1〉 설문조사 결과

분야	분석결과	시사점
인권개념 및 인권의식	· 인권 = 사회적 약자의 권리로 인식 ·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인지도 미비 · 인권상황 관심도 낮음	· 인권 요소별 의식 개선을 위한 접근 필요 · 인권 관심도 확대방안 마련 필요
인권실태 및 인권취약계층 상황인식	· 안전권과 사회보장권 보장 욕구 강함 · 아동 청소년(장애인)노인 순으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 해당 계층의 인권 보장 필요성 공감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실태 열악	· 수원형 사회보장서비스 확대, 강화를 통한 불안감 해소 마련 필요
인권침해 및 침해원인	· 10명 중 4명이 인권침해/ 차별 경험 보유 · 인권침해 경험: 종교/ 신앙,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침해 · 인권차별 경험: 나이 > 성별 순 · 인권침해 및 차별 원인: 경제력 > 장애유무 순	· 취약 계층별 인권 상황 조사 필요 · 시민들의 인권의식 고취를 통한 침해/ 차별 극복 필요(인권교육)
인권침해 대응방안	· 무대응이 일반적 · 당사자/ 해당기관 직접해결 방식 선호 · 적극적 해결 의지 존재	· 의지부족보다 절차/ 방법 모름 · 대응 방법 반영 인권교육 과정 개발 / 교육 확대 필요
인권교육	· 인권교육 경험 미미 (20%) · 인권교육 필요성 공감, 참여의향 높음 · 교육내용, 대상의 다양성 확보 요구 강함	· 다양한 대상, 주체, 상황에 맞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인권교육 확대, 운영 방안 마련

## 3.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조사만으로는 인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인권취약 권리주체별 각종 단체 대

1) 인권실태조사의 특성상 설문지의 내용이 다소 어렵고, 취업, 직장생활, 가정 등 성인에 적합한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만20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등의 인권실태는 FGI를 통해 보완하였다.

표 및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인권 취약 권리주체 당사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FGI 조사는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각 권리주체별로 가급적 균등하게 선별하여 전문가 53명, 당사자 64명이 참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1일 ~ 8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16번의 그룹인터뷰와 18번의 개별인터뷰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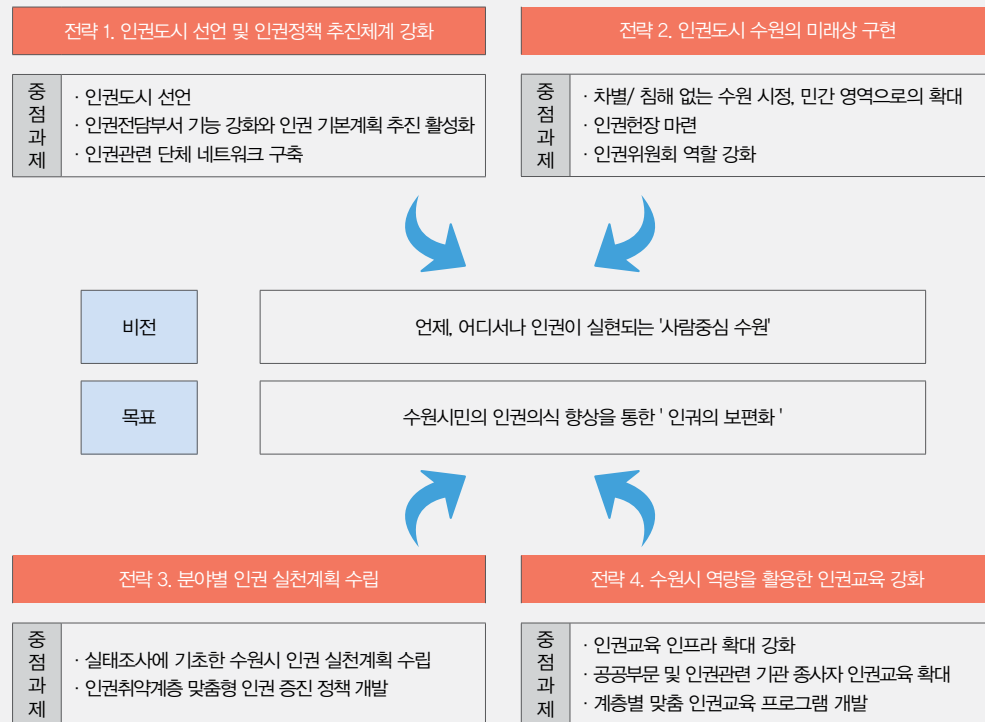
〈표 2〉 FGI 결과

분야	분석결과	시사점
장애인	· 시각/ 청각 장애 당사자의 인권 보장 열악(여성) · 이동권 만족도 ↑, 접근권 만족도 ↓ · 장애 당사자 가족 대상 인권 교육 필요 · 직업훈련 후 일자리 연계 미비(자립생활불가) · 해피콜 정책 만족도 우수, 운영 방식 불만	· 장애유형별 인권침해 유형 파악, 유형별 맞춤형 정책/ 인권교육 필요 · 장애당사자 가족 상담 프로그램, 인권교육 등 맞춤형 정책 필요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준수 강화 · 서비스 재교육 및 운영시스템 개선
여성	· 취약 계층이라는 인식/ 공감대 강함, 반면 인권개선 기대도/ 참여도 미비 · 성적 특성 피해에 대한 공감대가 강함 (불안감 확산이 빠름) · 노동권 보장 욕구가 큼	· 지역사회 내에서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가부장적 사회구조 변화, 직장 내 의식 변화 등) ·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확대 등 불안감 해소 정책 확대 필요 · 고용안정,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정책 지원 확대
아동 청소년	· 학교방침, 교사의 의지 정도에 따라 인권침해 및 존중정도의 격차가 큼 · 학업을 매개로 한 인권 침해 빈번, 가정/ 학교 모두에서 발생 ·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이 형식적	· 학교 외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제공 노력 확대 ·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 안전체험센터, 쉼터(여성청소년), 안전울타리 확대
노인	· 노인공경 인식 저하 = 인권침해로 인식 · 가정 내 인권침해 빈번 · 노인 일자리 보수 수준으로 인해 자원봉사자 취급, 자존감 하락/ 노인경시 요인으로 작용	· 노인 이해, 존경받는 노인상 확립 등 · 노인이 공존할 수 있는 포괄적 인권 교육 마련 · 노인 일자리 지원 관련사업 확대-실버사회 복무요원 제도도입 등 (가칭)
다문화	·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인권실태 매우 열악 · 일선교사/ 담당공무원에 의한 인권 침해 발생 빈도 높음 · 정보습득 창구, 언어지원 서비스 확대 욕구 강함	· 국적 취득 여부, 수원시 주민등록 여부를 떠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인권적 차원의 접근 필요 · 다문화 전담 부서 마련 등 수원시가 다문화 정책의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필요
북한이탈주민	· 학교 내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 인권침해 빈번 · 하나원 수료 후 지역공동체 편입 정책 전무 · 일회성/ 행사성 중심의 정책에 그침	· 지원 정책 재검토, 정책 목표 설정 단계에서 북한이탈주민 욕구 반영 노력 필요

#### 4.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수원시 비전 및 전략 제시

수원시는 2013년 7월 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팀에 인권행정을 위한 역할 부여 등 본격적으로 인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과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2]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비전 및 전략



#### 5. 인권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반영한 수원시 인권정책 방향 제시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수원시 비전 및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수원시 인권정책 방향을 자립가능한 일자리 정책, 수원시 시책 우선순위 등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 자립가능한 일자리 정책

실태조사 결과 수원시 인권행정 추진을 위한 '일자리'욕구가 취약계층에 상관없이 강하게 나타났다. 일자리 욕구의 핵심은 삶의 질을 보장받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므로, 인권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알맞은 일자리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권취약계층의 구직능력을 강화하여 일자리와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야간강의 개설, 전문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며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육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구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 및 기관 종사자의 교육도 요구된다.

<표 3> 자립가능한 일자리 정책 방향

<b>목표</b>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삶의 질 보장(강화)				
<b>방향</b>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원체계 강화				
	알맞은 일자리 매칭 시스템 마련				
<b>취약계층별 욕구</b>	실질적인 구직능력 향상 교육(구직능력 강화)				
	<b>장애인</b>	<b>여성</b>	<b>아동·청소년</b>	<b>노인</b>	<b>다문화</b>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소수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 마련 (여성, 장애인, 한부모가정, 결혼이주여성)	·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노동자 보호 정책 개발 및 지원	· 연령대에 맞는 구직 능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이주민 언어로 작성된 일자리 정책안내문 비치, 홍보
	· 사회적 기업 확대			·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중 민간분야 일자리 파견, 알선형 확대	· 찾아가는 생활 및 노동상담
	· 장애인 생산물 구매의달 지정				· 이주 노동자의 공동체 파악 및 지원책 마련
	· 장애인 일자리 통합 지원센터 설치 (고용복지통합센터 활용방안 검토)				



## ▣ 수원시 시책 우선순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원시 인권관련 시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현재 수원시 인권관련 시책의 분류 결과 '이동/접근권 > 안전권' 순으로 집중되어 나타났으나, 실태조사 결과로는 일자리 지원이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나타나는 등 인권 취약계층별로 원하는 시책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중인 사업의 우선순위의 조정은 물론, 앞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취약계층별 욕구를 파악해 시책별 관련 내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4〉 정책적 우선순위 제시

분야	수원시 시책 분석결과 우선순위	실태조사결과 시책 우선순위
장애인	▶ 아동/ 접근권 > 안전권 > 노동권 > 교육권 순 ▶ 실질적 자립지원 시책 미비	▶ 노동권 > 이동/ 접근권 > 사회보장권 순
여성	▶ 안전권 > 교육권 중심의 시책 구성	▶ 안전권 > 노동권(보육권) 순 ▶ 생애주기 욕구 차이 보임
아동 청소년	▶ 안전권 > 교육권 중심의 시책 구성	▶ 안전권 > 행복추구권 순
노인	▶ 안전권 > 건강권 중심의 시책 구성	▶ 건강권 > 사회보장권 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책 구성/ 집중 ▶ 사업 주체별 시행사업 내용 중복으로 실질적 혜택 기대 낮음 ▶ 일회성/ 행사성 위주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에 그침	▶ 사회보장권 > 노동권

## 광복 · 분단 70년, 민통선마을은 안녕하신가?

김일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연구교수)

생각보다  
따리를  
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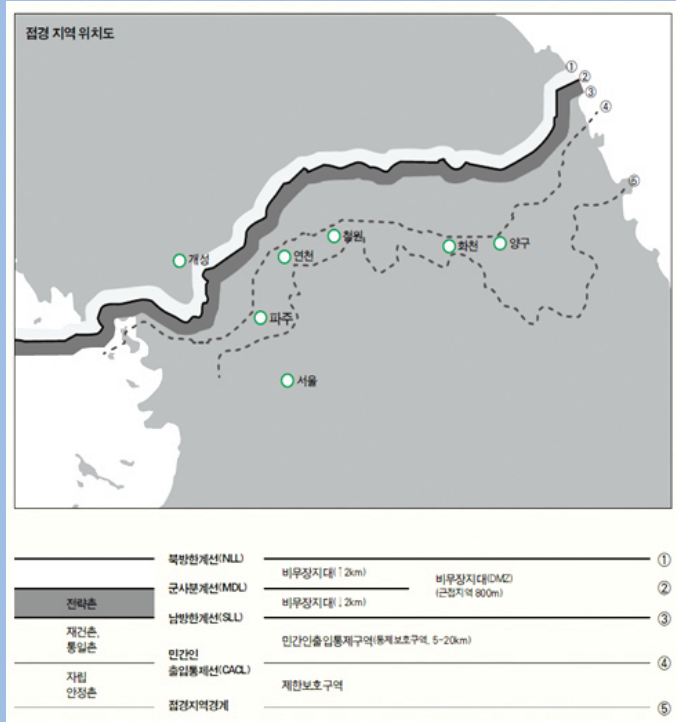
민통선마을이 뭘까요?

2014년 10월 1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연천군 중면 면사무소 앞마당에 북한군이 발사한 고사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69주년 기념일을 맞아 남한의 자칭 대북인권단체들이 북쪽을 향해 '빼리'(대북 전단지) 풍선을 날려 보내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연천군 중면은 황산리와 삼곶리(1990년 민통선마을 해제)로 구성된 최전방 행정구역 중 하나입니다.

뜬금없을지 모릅니다. 민통선마을이라니, 독자들의 대부분은 '아직 그런 마을이 있나' 혹은 '그런 마을도 있어'라는 반응이 대부분일 겁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기만 한 민통선마을(민북마을)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통선마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민간인출입통제선 등 약간의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접경지역은 국경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접경지역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6.25전쟁 이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형성된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과 접한 지역을 말합니다.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의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민간인출입통제선까지인 '민간인출입통제구역', 그리고 민간인 출입통제선 남방지역인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군사분



▲ 자료: 우승하 외, 『두루미가 자는 민북마을 이길리』, 2014 강원민속문화의 해 민속조사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 2014.06, pp. 92~98.

계선을 기점으로 비무장 지대는 휴전선 남북 방향으로 약 2km 후방 지역이며 유엔(UN)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이해에 따라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은 800m에 불과합니다. 접경지역 중에서 민통선마을은 남방한계선과 민간인출입통제선의 사이인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결론적으로 민통선마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최전방 민간인 거주마을입니다. 1953년 휴전이후 1954년 2월부터 전방지역 마을들이 민통선마을로 지정되었거나,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강원

도, 인천광역시 등 남북한 접경지에 모두 125개의 리(里) 단위 민통선마을이 지정·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통선마을이라고 똑같은 목적으로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나 성격에 따라 마을의 유형이 구분되었는데, 자립안정촌, 전략촌(재건촌), 통일촌, 비무장지대촌, 실향민촌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출입통제선의 북상에 따라 절반이상의 마을이 민통선마을에서 해제되면서 2012년 현재까지 54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늦게 형성된 민통선마을은 해마루촌(2003)이며, 가장 최근에 해제된 마을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2012)입니다.<sup>1)</sup>

1) 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p. 27.

**분단과 갈등, '위험한 평화'의 역사**

민통선마을의 역사는 바로 남북분단의 역사이자 지금도 진행 중인 냉전의 역사이며, 고난을 이겨온 민초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군사대립의 최전선이라는 이유로 민통선마을 주민들은 유무형의 규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대체로 1990년대 이후 민통선마을 주민들이나 방문자들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후방지역에 비하면 여전히 적지 않은 규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주택 신축 및 고도를 제한하고,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를 금지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를 제한하는 등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민통선마을은 출입, 개발, 입주 영농에 관한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거주하거나 드나들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출입과 활동에 있어 출입증은 항상 휴대해야 하고, 마을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입주민과 타 지역 거주 연고자 등 모든 사람이 관할 군부대의 출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 지역 거주 가족 등 방문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보통 1주일 이내로 제한되고, 통제초소에서는 체류자에 대하여 일일단위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체류기간과 함께 출입허용시간도 제한되는데, 최대 일출 30분 전부터 최대 일몰 30

분 후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카메라, 수렵장비, 고성능통신장비, 어로장비 등은 당연히 제한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영농기에 주민들을 식별하기 위해 복장의 색깔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겨울철에는 적색 계통의 옷을 입어야 했다고 합니다. 규정을 어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출입증 영구회수 등 제재가 따르는 것은 물론입니다. 조성 목적에 따라 마을의 성격은 매우 다양합니다. 군사적인 측면과 함께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할 목적으로, 유희지 등 농지를 개간해 식량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민통선마을의 성격은 다양각색입니다. 북한의 선전촌에 맞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마을이 통일촌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1972년 조성)와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1973년 조성) 단 2곳입니다. 통일촌은 신원이 확실한(?) 인근 지역주민과 실향민, 그리고 제대군인들의 투철한 반공의식을 바탕으로 조성된 마을입니다. 입주당시 남한 정부는 입주민들에게 주택, 농지, 주민복지 제공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사상적으로 투철하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견실한 가정은 물론 장교를 포함해서 엘리트 제대군인 가족들을 입주시켰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유곡리의 경우, 일반가정 30가구, 제대군인 30가구 등 총 60가구가 입주했습니다. 통일촌은 국방부 등 8~9개 중앙정부부처의 지원으로 마을 조성 계획이 수립될 정도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마을입니다.



▲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입주기념탑에 기록된 입주당시 세대주 명단.(2015.02.26. 필자 촬영)

1973년 경기도 파주의 통일촌과 같은 날 동시에 입주한 유곡리는 파주 통일촌 80세대보다 20세대가 적은 60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스라엘의 '키브츠'를 모방해 만든 '통일촌' 유곡리는 전선방위는 물론 유희경지의 활용을 목적으로 건설되었고, 이전의 재건축과 달리 정부가 직접 나서 가구당 500만원 이상의 거금을 지원할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전략적으로 만든 인공마을입니다. 당시 읍내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전기를

설치한 것은 물론, 세대 당 논 3,300평과 밭 3,000평씩 경작권을 줬으며 경운기와 소를 배급하고 철원군에 몇 대밖에 없던 전화도 집집마다 놔줄 정도로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철원군에서 학생 통학용 등으로 사용하라고 버스와 기사까지 배치해줬지만 마을 주민들이 "휘발유 값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반납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입주경쟁은 지금의 입사시험에 비유할 정도로 수 십대 일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군(郡)과

군(軍) 등 민·군 합동으로 구성된 입주민 심의위원회는 입주민의 연령과 가족 수까지 제한할 정도로 입주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sup>2)</sup>

최전방 마을의 특성상 군사적 목적도 강했는데,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마을(2007년 해제)은 1970년 원주민 3가구를 제외하고 100가구 모두 제대군인이 이주하면서 세칭 '예비군 마을'로 불렸고,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2리(1968년 조성) 주민들은 군인들과 함께 경계근무를 담당할 정도로 군사안보적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조가 살던 고향을 뒤로하고 마을주민이 통째로 이주해서 민통선마을을 조성한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1리(1960년 조성)는 1959년 경북 울진에서 태풍 사라호 피해가족 800여 명이 강원도 산골 최전방으로 마을전체를 이주한 사례입니다. 주민들은 태풍 피해로 삶의 터전이 사라지면서 먹고 살 새로운 방편이 필요했고, 정부는 민통선 이북지역의 개간과 군사적 목적으로 이주민이 필요한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경우일 것입니다. 마현1리 입주민들은 1960년 4월 4일 울진초등학교에서 고향 친지들의 환송을 받은 후 23대의 군 트럭에 몸을 맡긴 채 횡성~춘천~화천을 거친 1,400여리의 길을 3박 4일간의 긴 여정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안 제사 등 가족사를 돌보기

위해 고향 울진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4월 7일 도착한 이들을 반긴 것은 짓과 꼴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닌 사람의 키를 넘는 역새밭 사이에 횡 하니 놓인 60여동의 군부대 천막이었다고 합니다. 곳곳에 널려있는 전쟁의 상흔과 발자국을 떼어 놓기가 겁나는 지뢰밭 공포가 엄습했지만 이들은 정부와 도의 지원을 믿고 '잘살아보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12일 후에 4·19가 나면서 정권이 바뀌어 버렸고 이들에게 지원을 약속한 강원도지사과 철원군수도 모두 교체되면서 그동안의 약속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24인용 군용 천막에서 이주생활을 한 이들은 10여 년간 버려진 황무지를 거의 맨손으로 개간하는 등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어렵게 농토를 일궈나갔습니다. 주민들은 지천에 널린 탄피를 주워 30여리 떨어진 와수리 장에 나가 보리쌀과 바꿨고 밀주를 담가 군인들에게 팔며 생활을 이어나간 역사가 1989년 마현청년회가 세운 기념탑에 남아 있습니다. "사라호 태풍 66세대가 이 땅에 입주해 고달픈 천막생활과 허기진 배를 주리며 피땀으로 열룩진 꿩이와 호미로 6·25동란이후 버려진 황무지를 옥토로 가꾼 개척정신을 알아야 한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조상들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탑을 세웠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는 강원도 속의 경상도 마을로 존재합니다.<sup>3)</sup>

2)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2006년 10월 17일.

3)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2006년 10월 31일.



▲ 펀치볼(Punch Bowl)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1,2,3리, 오유1,2리, 만대리 등 6개 마을로 구성(2015.02.21. 필자 촬영)

일반에 가장 잘 알려진 마을은 아마도 펀치볼(Punch Bowl), 화채그릇을 닮았다고 해서 6.25전쟁 당시 미군들이 이름붙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마을일 겁니다. 비교적 고지대에 속하면서 토질이 좋아 고랭지 농작물이 잘 자라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고, 6.25전쟁 중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곳 중의 하나로 유명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원주민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남한 정부는 인근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주민을 선정—물론 신원조회라는

이름으로 사상이 검증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안면은 1956년 4월 정부의 피해복구정책에 의해 강원도에서 최초로 160세대 965명이 1차 입주, 1958년 원주민들 위주의 2차 입주, 1972년 재건촌 형태로 100가구 472명이 3차 입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입주민들은 가족 가운데 예비군이 반드시 있어야 했고, 한 건의 교통법규 위반도 안 될 정도로 까다로운 입주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sup>4)</sup>

4)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2006년 11월 07일.

### 민통선마을,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민통선마을의 공통점은 입주 초기 황무지를 스스로 개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인 탄피, 지뢰 등<sup>5)</sup>을 제거하는 일부터,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나무뿌리를 제거하는 일까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입주초기 대부분의 마을에는 농기계 보급이 전무한 상황이었고, 먹고 자는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고충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마을과 힘들게 조성한 농지가 오늘날에 와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입주초기 정부가 약속한 집과 땅은 원소유주와 국유재산의 소유권 벽을 넘지 못하고 갈등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당시 정부에서 인정한 경작권만 믿고 소유권 없이 개간한 토지를 두고 소유권자와 벌이는 ‘소유권 분쟁’은 대부분의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겪는 고충으로 알려집니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시행된 ‘수복지역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작된 토지 소유권 분쟁은 대부분의 민통선마을 주민들에게는 토지소유 의지를 박탈하게 하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민통선 북방지역의 토지를 농토로 개간한 경작자들은 점유권이 이탈된 ‘주인 없는 땅’을 피땀을 흘려 옥토로 만든

만큼 법적으로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통선지역의 유희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한 것은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부인하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며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줬습니다. 이 때문에 민통선마을 주민들은 소유자로부터 땅을 매입하거나 소작료를 주고 임대할 수밖에 없었지만 원소유자와 개척자 사이에서 빚어졌던 갈등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sup>6)</sup>

새로운 기회를 찾아 모여든 입주민 1세대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지키고 있지만, 보다 큰 문제는 2세, 3세대들이 더 이상 마을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농촌마을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통선마을의 급격한 고령화현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국토는 연결되겠지만, 핵심고리인 사람은 단절되는 모순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냉전체제의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새로운 문화적 유산일 수밖에 없는 민통선마을이 공동화되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단 70주년을 맞아 민통선마을의 안녕을 묻는 이유입니다.

민통선마을은 안녕하십니까?

5) 연합뉴스, 2014년 03월 09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DMZ와 민통선 일대 지뢰매설 수는 무려 100만발이다. 미확인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 약 489년 걸린다는 게 통설이다.

6)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2006년 10월 17일.

# 캘린더

## 수원시정연구원 주요행사

- 캘린더
- 연구소식
- 행사소식
- 수원읽기포럼



### 2015. 3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일 (월) 월례회의  
수원시정연구원 주간통신문 '사통팔달' 첫 발송
- 3일 (화) 편집위원회 회의
- 5일 (목) 수원화성권역 보존관리 활성화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 10일(화)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
- 12일(목) 수원시의회 업무보고  
수원읽기포럼\_수원을 읽는다
- 19일 (목) 연구사업 수행지침 전체회의  
수원읽기포럼\_수원을 걷는다  
남동국가산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통근버스 운영방안 착수보고회
- 20일 (금)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의 서울-수원 공동사업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 27일 (금) 수원시정연구원 개원2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발표
- 28일 (토) 수원시정연구원 개원기념일
- 30일(월) 지속가능도시재단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수원시민 생활양식과 정주의식 조사 최종보고회

# 캘린더

## 2015. 4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일 (월) 수원미래전략연구포럼
- 3일 (금)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운영 및 사례분석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환경·교통위원회 워크숍
- 6일 (월) 월례회의
- 7일 (화) 편집위원회 회의  
효과적인 수원시 도시디자인 행정방안 토론회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의 서울-수원  
공동사업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 13일 (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자치교육위원회 워크숍
- 16일 (목)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대상자 심의 및  
시민의목소리위원회 위촉식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복지·여성위원회  
워크숍
- 18일 (토) 시민교통평가단 발대식 및 교통포럼 개최
- 20일 (월) 수원시 공영자전거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중간보고회
- 20일 (월)~24(금) 연구원 종합감사
- 24일 (금) 북경민원모순분석 및 연구센터 대표단  
연구원 방문
- 27일 (월) 수원학세미나 및 수원읽기포럼
- 30일 (목) 인구 100만 수원특정시 추진 설명회 발표

## 2015. 5

- 4일 (월) 월례회의
  - 6일 (월)~7(금) 2015년도 청렴교육
  - 7일 (목) 편집위원회 회의
  - 22일 (금) 수원화성권역 보존관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완료
- 남동국가산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통근버스 운영방안 최종보고회(예정)

## 2015. 6

- 1일 (월) 월례회의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운영활성화  
방안연구 완료
- 10일 (수)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 30일 (화) 탄소저감 도시계획 지원시스템  
검증을 위한 통합 테스트베드  
운영관리 2차 완료

# 소식

## 연구 소식



### 수원화성권역 보존관리 활성화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3월 5일 수원시청 제1부시장 집무실에서 김주석 연구위원의 연구과제인 '수원화성권역 보존관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되었다. 제1부시장과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문화유산시설과의 각 과장 및 팀장, 주무관 등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수원화성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삶의 현장으로서 공생하는 문화재구역으로의 관리를 위한 검토와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수원시민 생활양식과 정주의식 조사 최종보고회

수원시민 생활양식과 정주의식 조사 최종보고회가 3월 30일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진행되었다. 연구 책임자인 최지연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고 16명의 연구위원과 연구원들이 참석하였다. 수원시민의 가구 및 가족특성, 사회적 관계, 생활양식, 정주의식 등을 다루었고, 이어 수원시민이 갖는 특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소식

### 지속가능도시재단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3월30일 수원시청 도시정책실에서 '지속가능도시재단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허현태 연구위원의 연구과제로 이용호 (도시정책)실장, 이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민수 상임기획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과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기구로서 민법상의 재단 설립 여부에 대한 검토와 향후 일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지속가능 발전과 도시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조직을 연구할 것이다.



### 수원시정연구원 개원2주년 기념식

3월 27일 수원시정연구원 '개원2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인 수원시정 전반의 정책대안 제시 기능 강화와 연구원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인사말씀과 지난 2년간의 연구원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어 김숙희 연구위원의 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 소식

### 효과적인 수원 도시디자인 행정 방안 토론회

4월 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효과적인 수원 도시디자인 행정 방안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곽호필 (전략사업)국장, 송영완 (정책기획)과장, 박선길 (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각 팀장과 수원시정연구원의 김충관 (행정지원)부장, 정수진 (도시디자인센터)센터장 등 11명이 참석하였다. 도시디자인센터 주요업무 논의 및 실무협회가 진행되었다.



### 2015 수원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위촉식 및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1차 심의회

4월 16일 오후2시 수원우편집중국 대회의실에서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을 비롯한 약 30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수원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위촉식 및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심의회가 진행되었다. 위촉기간이 종료된 17명의 재위촉과 8명의 신규위촉으로 2015년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될 총 25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한 과제 발표자들의 발표와 과제 심의가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총10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 수원시정연구원 종합감사 실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수원시정연구원 종합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번 종합감사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공개감사로 조인규 감사팀장 외 5명의 감사관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이를 수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 등의 제보를 받았다.

## 수원입기포럼

### 수원을 읽는다

3월 12일 수원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 건축과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정수진 도시디자인센터장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제주에 지어진 건축가 정기용과 이타미 준의 건축물을 바탕으로 공간 구성, 특징들을 소개했다. 도시디자인으로써 '바오젠 거리'의 특색과 취약점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건축과 도시디자인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 수원을 걷는다



3월 19일 진행된 '수원을 걷는다'는 '수원과 불교'라는 주제로 창성사지, 청련암, 사직당을 답사했다. 광교산에 위치해있는 창성사는 창건과 폐사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태종실록'에 따르면 국가가 공인한 대표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창성사지를 둘러보며 백제 때부터 시작된 수원의 불교역사와 시대 근거를 알 수 있는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청련암, 사직당 등을 답사하며 수원의 불교와 시대별 사찰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편지상우기

**안순기** <더 페이퍼>,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CNS 정보센터 대표

**유종욱** 유엔미래보고서에서 2030년엔 사회적 기업이 전체 기업의 절반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수원시가 사회적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 하길 바랍니다. 분투하고 있을 사회적 기업인 모두 힘내십시오.  
작가

**김충관** ... 비가 오락가락 한다. 번덕스런 날씨때문인지 마음이 번잡스럽다. 여덟 번째 책을 펴내며 생각이 많다. 자꾸 되돌아본다. 내일은 맑은 하늘을 기대해본다.  
수원시정연구원 행정지원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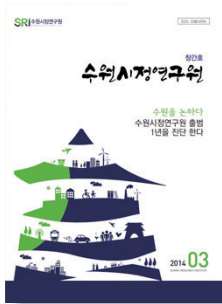
**이영안**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가 창출됩니다!'라는 뉴스를 들을 수 있는 날 이 오기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초원** 수원시정연구원 정기간행물이 더욱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부합하는 시정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산** 돈이 아닌 꿈을 찾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 답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 행정지원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을 논하다’ 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창간호**

수원시정연구원 출범,  
1년을 진단한다



**제2호**

KT위즈의 출범과  
수원시민의 행복지수



**제3호**

수원은, 수원시민은  
안전한가?



**제4호**

수원, 주민자치  
중심에 서다



**제5호**

수원의 문화관광



**제6호**

수원학개론



**제7호**

수원의 아이들을  
위하여